

## 도시의 시민성과 ‘공감의 정치’: ‘유동하는 공포’를 벗어나 ‘행복국가’로\*

김 중 욱\*\*

이 글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자연파괴 성장에 의한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 심화와 지구 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근대와 자본주의의 상징인 도시에서 벌어지는 불평등, 불공정, 불합리한 현실을 서술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커먼즈운동’과 ‘공감의 정치’를 살펴보았다. 대안사회를 지향하는 ‘커먼즈운동’과 인간본성인 공감능력의 확대를 결합하여 국가와 사회가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계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커먼즈운동’은 국가와 자본의 본거지에서 새로운 자율적 공동체를 만들어 공간을 재탈환하자는 것이다. ‘공감의 정치’는 갈등과 투쟁의 극단의 정치를 배제하고, 약자를 위한 정치를 위해 다수 유권자를 구축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탈주하기 위해 인간의 공감을 통한 민주주의의 활로를 개척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의 생생함을 경험하고, 풀뿌리 조직과 민주주의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사회로 이행하자는 것이다.

주제어 : 공감, 행복, 커먼즈운동, 불평등, 자본주의, 유동하는 공포

\* 이 글은 2019년 8월 23일 고려대 SSK 불평등과민주주의연구센터가 주최한 [SSK 세미나] 도시문제와 민주주의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그리고 부족한 논문을 심사해주고 정확한 비판을 제시해 준 세 분의 심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 1. 들어가며: ‘과국’과 ‘과멸’, 인간문명은 지속될 수 있을까?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지구의 인간 거주자들은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는 서로 손을 맞잡을 것인지, 아니면 같이 공동묘지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지그문트 바우만 2018, 257).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이행의 징표는 신분적 굴레에 갇혀있던 신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의 전제조건은 신분해방이며, 자유롭고 평등해진 시민은 주권자로서 자기통치와 자기입법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치의 선언, 즉 누구의 지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통치할 수 있다는 선언이다. 그것은 근대로 진입한 사람들의 ‘시민성’이기도 했다. 시민성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재(再)정의 된다. 또한 시민이 당대의 문명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점에서 시민성은 문명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문명은 생산, 행동, 사유, 풍류, 예술, 생사(生死)의 양식(styles)·방법(methods)·기술(technics)·망식(fashions)을 표현하며, 따라서 사람들이 생산하고 분배하고 먹고 즐기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평가하고 살고 죽는 생활방식의 총체이다(황태연 2011, 29). 이러한 문명의 진행과정에서 시민은 탄생했고, 그 문명의 생활방식은 시민성을 구성한다. 따라서 시대의 진단은 바로 시민성과 잇닿아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촘스키(Noam Chomsky)는 인간문명이 지금의 자본주의를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적 예측을 내놓았다(눔 촘스키 2019, 43).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등장한 근대의 시간은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경제시대를 거치면서 ‘신(新)신분질서’로 구조화되고 있다. 이 흐름은 다시금 자유와 평등의 근간을 훼손하고, 자기통치와 자기입법 실

현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다. ‘신(新)신분질서’의 원인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누적에 따른 양극화의 확산, 그것의 사회적 적용으로서 불평등의 구조화라 할 수 있다. 불평등의 양상은 전(全)지구적으로 구조화되고,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권력·사회자본·문화자본의 불평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동하는 공포’<sup>1)</sup>는 불평등과 ‘신(新)신분질서’라는 토양 위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자본의 무한 축적과 인간의 진보에 대한 욕망이 결합된 지구 환경 파괴로 인해, 인류는 현재 ‘지속가능성’ 테제를 목도하고 있다. ‘지금’ 2020년 지구를 떠도는 ‘코비드(COVID) 19’의 공포는 그야말로 ‘유동하는 공포’이며, 인간의 자연파괴에 대한 자연의 인간에 대한 공습이다. 즉, 21세기는 자본주의의 불평등 구조화에 따른 ‘파국(破局)’의 가능성과 인간의 지구 파괴에 의한 ‘파멸(破滅)’의 가능성이 중층적으로 결합된 시대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전자는 위기의 극복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통해 해결의 기회로 포착될 수 있으나, 후자는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우리 앞에 등장한다. 전자의 위기를 기회로 포착하여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인간문명을 위해 사활적이다. 전자는 그러므로 ‘커먼즈(communs)’라는 용어로 등장하는 것이며, 파국과 파멸을 일으키는 본거지인 도시에서 더욱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다. 후자의 문제는 ‘커먼즈’를 통한 지속가능성의 공감대 형성 문제다. 하지만 이 또한 누구도 겪지 못한 것이기에 그저 상상과 지금까지의 경험 한계 내에서의 대안이라는 수준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난국(難局)’이고 ‘난망(難望)’이다.

---

1) “공포가 가장 무서울 때는 그것이 불분명할 때, 위치가 불확정할 때, 형태가 불확실할 때, 포착이 불가능할 때, 이리저리 유동하며, 종적도 원인도 불가해할 때다. 어떤 규칙성도 합리적 이유도 없는 공포, 그 낯새가 여기저기서 선뜻선뜻 나타나지만, 결코 통제로 드러나지는 않는 공포야말로 가장 무시무시하다. ‘공포’란 곧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위협의 정체를 모른다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에 달려들어 맞서 싸우려 해도, 싸워볼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지그문트 바우만 2009, 11-12).”

이 비극적 전망의 반대편에 행복(happiness)이란 단어가 배치된다. 행복에 대한 연구는 학문 영역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행복 또는 웰빙(well-being)과 관련된 논문이 1980년 1년 동안 약 1390편이었던 반면, 2013년에는 매달 1000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존 헬리웰, 거스 오도넬, 리처드 레이어드 2017, 13). 많은 국가들은 국민의 행복을 정부 운영의 중심적 가치로 이동시키고 있다. 과거 경제성장 지상주의에서 행복 지향으로 국가목표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1인당 GDP가 15,000달러를 넘기면 소득과 행복간의 연관성이 사라진다(Layard 2003, 17)는 연구결과가 성장에서 행복으로의 방향 이동의 근거를 설명해준다. 동시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하에서 소득의 증가는 상대적 양극화를 더욱 구조화시키며, 소수의 가진 자를 제외한 다수의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

그리고 사회적 부의 상승은 사회를 기계화·도시화 하는데, 이 도시화 현상은 행복을 위협하는 불행요인들의 증가로 인도한다. 각종 질환, 범죄, 갈등, 각종 산재·교통·안전사고, 환경파괴에 따른 천재지변, 공해, 스트레스 등으로 인간의 행복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동시에 사망과 유병(有病), 행복의 훼손으로 인한 자살, 각종 스트레스와 갈등 등으로 인한 이혼율의 상승과 유아에 대한 학대 그리고 범죄율의 증가 등이 나타난다(김종욱 2016, 141). 즉, 사회적 부의 상승은 도시화로 이어지고, 도시화의 부작용으로 다수의 빈자·약자들은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행복 연구자들에 의하면, 매우 가난한 나라를 제외하고 소득보다는 행복이 인간관계의 질을 바꾸며, 성공적인 사회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매우 높은 신뢰를 가지며, 그 신뢰 속에서 관계를 맺어나가는 과정에서 행복을 더욱 많이 느낀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더 돌보는 사람들이 대체로 더 행복하기 때문이다(존 헬리웰 외 2017, 79-82).<sup>2)</sup>

우리는 이런 행복연구의 결과를 통해 공감과 동정심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 지수를 만들어 낸 부탄은 2008년 채택된 헌법에 따라 총리를 선출했다. 선출된 총리는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GNH에서 우리는 ‘행복’을, 종종 그 용어와 연관되는 유쾌하고 ‘기분 좋은’ 일시적 상태와 명백히 구분하고자 한다. 타인이 고통 받고 있을 때 진정한 지속적 행복은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타인에게 봉사하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서, 그리고 자신의 정신의 진정한 빛나는 본성과 우리의 내면적 지혜를 깨닫는 데에서 진정한 지속적 행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sup>3)</sup>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공감과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포괄하는 ‘생명애(biophilia)’로부터 오며, 행복은 도덕적 공감감과 동물·자연에 대한 ‘생명애’를 통해 지속된다. 동시에 사물인 공간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근대의 도시화가 불행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공간 창출이 논의되고 있다.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공간의 생산』(2014), 푸코(Michel Foucault)의 『헤테로토피아』(2009), 하비(David Harvey)의

---

2) 현상적으로 불평등에 의한 불행은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에게 더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농격차에 의한 농촌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낮은 행복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도시는 잉여생산물이 사회적·지리적으로 집적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 잉여는 점진적으로 소수의 수층으로 집적되었으며, 도시는 과잉자본 흡수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며 지리적 규모를 끊임없이 확대하면서 도시 대중에게서 일체의 도시권을 박탈하는 ‘창조적 파괴’ 과정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데이비드 하비 2017, 55). 도시에서 잉여(이윤)를 빨아들이는 소수에 의해 도시대중에 대한 ‘창조적 파괴’가 벌어지는 것과 동시에 교외와 농촌의 잉여를 빨아들이면서 ‘강제적 파괴’도 동시에 발생한다. 잉여 집적의 원천인 도시의 변화 없이 교외와 농촌의 불평등 해소는 요원하다.

3) “Educating for Gross National Happiness” 회의 개최사: Lyonchlen Jigmi Y.Thinley, Thimphu, Bhutan. 2009년 12월 7일.

『*Space of Hope*』(2000)와 『반란의 도시』(2017)에서 이제 도시 ‘커먼즈’ 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파국’과 ‘파멸’을 넘어서야 한다는 시민에 의한 시민성의 표출이며 절멸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에 의한 것이다.<sup>4)</sup>

## 2. 도시, ‘불행의 공간’에서 ‘대안의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도시는 역사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안보와 안전의 환유어였으나, 그것이 이제 위협과 폭력의 원천으로 바뀌었다(Mendieta 2005, 지그문트 바우만 2009, 118 재인용).

멘디에타의 절망적 푸념처럼 근대를 상징하는 도시는 왜 ‘위협과 폭력의 원천’이 되었는가? 도시는 왜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공간으로 우리에게 등장했는가? 도시는 왜 도처에 편재(遍在)된 공포로 인해 피할 공간을 찾을 수 없게 되었는가? 그래서 바우만의 공포에 대한 설명은 한 편의 호러(horror)영화를 보는 것 같다.

공포는 어디서나 새어든다. 우리의 가정에, 전 세계에, 구석구석마다, 틈마다 흠마다 스며든다. 공포는 어두운 거리에도 있고, 반대로 밝게 빛나는 텔레비전 화면 안에도 있다. 침실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다. 우리의 일터에는 공포가 기다리고, 그곳을 오가기 위한 지하철에도 공포가 도사

---

4) 르페브르의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는 푸코의 개념과 달리 도시에서 ‘다른 무언가를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혁명의 궤도를 정하는 토대의 의미를 지닌다(데이비드 하비 2017, 20). 푸코는 양립 불가능한 복수의 공간, 복수의 배치를 하나의 실제 장소로 나란히 구현할 수 있으며, 한 사회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변화되어 작동시킬 수 있는 열립과 단립의 체계로서 ‘헤테로토피아’를 설명한다(푸코 2009, 50-53).

린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혹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서도, 우리가 소화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접촉하는 것들에도, 공포가 숨어 있다 (지그문트 바우만 2009, 15).

도시에 편재된 공포는 삶을 불행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아이디어와 노동은 약탈의 창고가 된다. 하지만 ‘약탈당함과 불행해짐’은 당연한 사회 작동원리로 옹호된다. 불평등에 의한 ‘가난해짐’은 무능과 게으름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아이디어 없음과 잘못 살아온 자신의 삶 때문이다. 이런 양상이 나타나니 유전공학자 리 실버(Lee Silver)가 ‘젠리치(GenRich)’라는 유전자 엘리트와 나머지 전부인 ‘자연인(Naturals)’의 두 인류를 상상했던 것이다(발터 사이델 2017, 559).

하비는 “도시란 경제적인 탈취를 목적으로 철저히 권력과 자본에 의해 이윤을 추구하는 일부 집단과 개발된 인프라로부터 소외되는 다수의 도시 노동자가 대립하고,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오로지 자본의 이해관계에 의한 것으로 도시인구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신성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침해” 당한다고 규정했다(김갑곤 2019, 414). 자본과 국가의 지배와 통제 아래 시민사회가 활력을 잃어간다면, 시민의 권리는 약화되고 삶의 질은 하락하고 불행은 일상화 될 것이다.

하지만 도시의 시민은 이런 사태를 그냥 용인하지 않는다. 도시는 불평등의 공간임과 동시에 저항이 발생하는 공간이다. 새로운 가능성의 출발은 바로 도시의 일상정치를 통해 착수된다. 도시의 시민은 “권력이 부과한 기존질서의 골격을 재채용하고 내부적 변형을 가하며 일상적 투쟁과 저항을 실천”한다. 이 투쟁과 저항을 통해 “지배집단이 부과한 체계를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무한히 변환하고 적응하는 전유(appropriation)”의 과정이 반복된다(장세륵 2002, 213). 또한 대중은 불

평등과 억압에 맞서 저항적 통방(通房)행위와 연대적 모의를 통해 지배의 의도를 전유한다. 이런 경험은 누적되어 사람들의 지혜와 현명의 결정판인 ‘메티스(mētis)’로 진화한다. 즉, 국가의 제도도 다양한 인간들의 ‘메티스’를 통해 변경·갱신·반복을 거친다(스콧 2010, 472-477). 시민은 이미 ‘대안의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사적 경험을 체득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불행은 행복의 반대말이다. 행복이 ‘즐거움’, ‘즐감’, ‘기꺼움’의 의미라면, 불행은 ‘괴로움’을 뜻한다. 도시의 시민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삶이 괴롭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느끼는 고통의 징표는 도처에서 확인된다. 21세기 최대의 위협은 불평등이다. 양극화에 의한 불평등의 구조화와 자원의 불균형에 기인한 정치권력의 편중성은 소수에 의한 다수의 소외를 일반화시킨다. 이런 상황은 다양한 통계와 지표가 잘 보여주고 있다.

2015년 지구의 최고 부자 62명이 인류의 절반인 하위 35억 명의 개인 순자산에 합친 것만큼 소유했으며, 전 세계 가구 중 제일 부유한 1퍼센트는 지구상 개인 순자산의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이 소유하고 있고, 미국 최고 부자 20명은 미국의 하위 50퍼센트 가구를 전부 합친 것만큼 소유했다(발터 샤이델 2017, 17-18). 1970년~2005년까지 80개국의 동향을 다룬 조사에 의하면, 국제 무역 자유화 및 그와 함께 일어난 규제 완화가 불평등을 상당히 증대시켰다는 것을 밝혀준다(발터 샤이델 2017, 539).

이와 같은 경제적 불평등은 바로 정치권력의 편중성으로 연동된다. 미국의 투표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2010년 극빈층 가구는 4분의 1이, 15만 달러 이상의 소득 계층은 절반 이상이 투표를 했다. 더욱 특징적인 것은 미국의 ‘1퍼센트’가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들은 나머지에게 비해 과세, 규제, 사회복지에 대해 보수적이다. 자본과 정치의 결합 양상을 보면 더욱 잘 확인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최고 소득을 벌어들이는 0.01퍼센트는 1980년대에 전체 선거자금 기부액의 10~15퍼센트를

기여했지만, 2012년에는 전체의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했다. 따라서 정당과 정치인은 정치자금의 흐름에 따라 보수적 방향으로 접근하는 경향성이 강해지며 감세와 규제 완화, 탈(脫)노조화와 최저임금 하향화가 진행됨으로써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다.

이런 정치와 경제의 ‘야합’은 불평등으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미국에서 1979~2007년 시장 소득 증가의 60퍼센트가 ‘1퍼센트’에 의해 흡수된 반면, 전체 증가분의 9퍼센트만이 하위 90퍼센트에 돌아갔다는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발터 샤이델 2017, 542).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어쩌면 가장 빠른 속도로 불평등사회에 진입하는 전형일지도 모른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경쟁적·약탈적 구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속에도 대한민국은 GDP 1조 6,194억 달러(2018년 기준)로 세계 12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다. 경제지표인 GDP만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잘사는 나라다. 우리 국민의 평균 IQ는 세계에서 1, 2위를 다툰다. 그러나 국민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 이것은 다양한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한국 소득 상위 10%, 하위 10%의 월 평균 소득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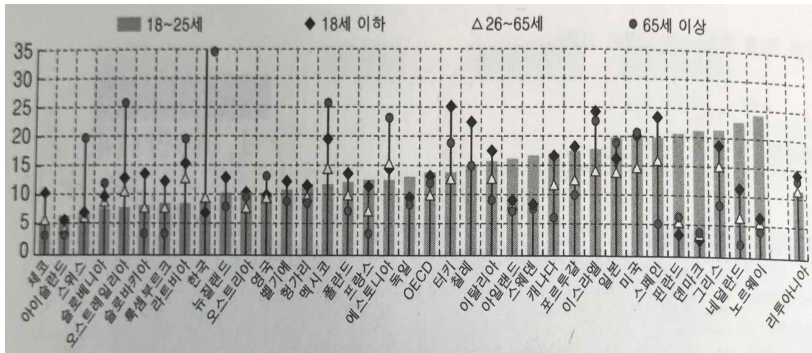


출처: 「중앙일보」 2018.

2016년 기준 한국의 소득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는 43.3%이며, 나머지 90%에 돌아가는 소득과 유사하다. 또한 소득 상위 1%는 전체 소득의 12%를 가져간다. 상위 소득 10%는 소득이 계속 상승해 2018년 월 평균 1180만114원을 벌어들이는 반면, 하위 소득 10%는 소득이 계속 하락해 동년 월 평균 85만7396원을 벌고 있다. 매달 수익 격차가 1094만2718원이 발생한다. 연으로 환산하면 1억3131만2616원의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그림 1 참조).

더 큰 문제는 이런 세계적인 소득 격차를 넘어서 한국사회에서는 세대 간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한국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0.302/2014)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빈부 10% 간의 격차는 높고, 중위소득 50% 미만의 비율(14.4%)도 상당히 높은 것(OECD 평균 11.4%)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위소득 50% 미만의 비율에서 65세 이상의 비율이 49%에 이르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중위소득 50% 미만 비율(세대별,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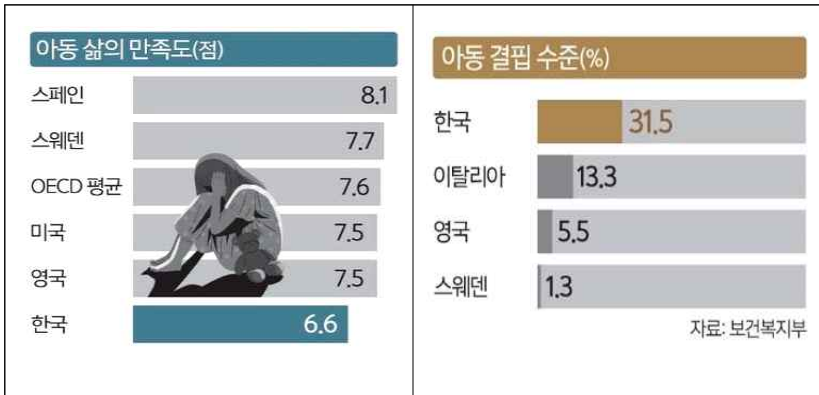
출처: Provisional data from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oe.cd/idd>

이와 함께 한국의 각종 지표는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는 하락하고 있다. 즉, 경제규모는 계속 커지고 성장하는데, 다수의 삶은 불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2018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1인 가구가 전체가구의 28.6%(2017년 기준)인데, 1인 가구 증가를 이끈 세대는 4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 3).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60대 1인 가구가 2016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의 40~50대는 '고독한 중년'에서 '빈곤한 노년'이 되고, 65세 이상의 노인은 불행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아동들이 삶에 만족을 느끼며 사는 것도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8년 아동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OECD 27개국의 평균 아동 삶의 만족도(7.6점)보다 상당히 밑돌며, 여가활동이나 음식 섭취 등 삶에 필요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아동의 비율을 뜻하는 결핍지수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그림 3) 참조). 어린 시절의 결핍을 안고, 성인이 되어 불평등한 사회에서 경쟁해야 하며, 외롭고 빈곤한 노인으로 가는 삶은 그야말로 고통이고 불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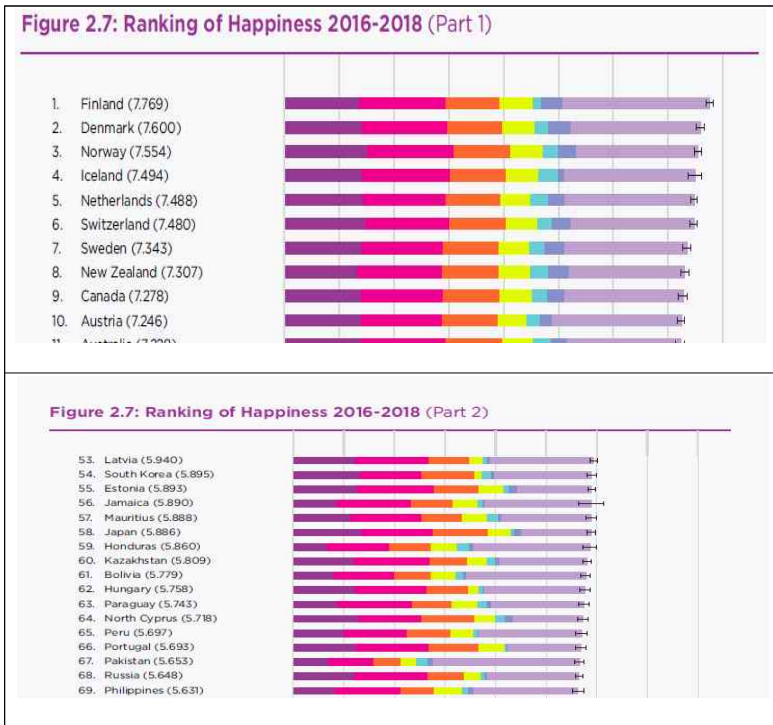
〈그림 3〉 주요국 아동 삶의 만족도와 결핍



출처: 「조선일보」 2019.

이런 구조 속에서 한국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정부 신뢰도가 낮은 것은 당연하다. Gallup World Poll의 조사(2014년 기준)에 의하면, 한국의 삶의 만족도와 정부 신뢰도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하위권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니 156개국 대상 국민의 행복도 조사에서 한국은 세계 54위에 그친 것이다(그림 4 참조). 이런 상황에도 한국의 공적 사회지출비용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가운영과 사회 작동 패러다임의 전면적 변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다. 환경 파괴적 발전방식, 도시화와 같은 과밀한 공간구성, 심화되는 불평등 사회경제 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행복의 추구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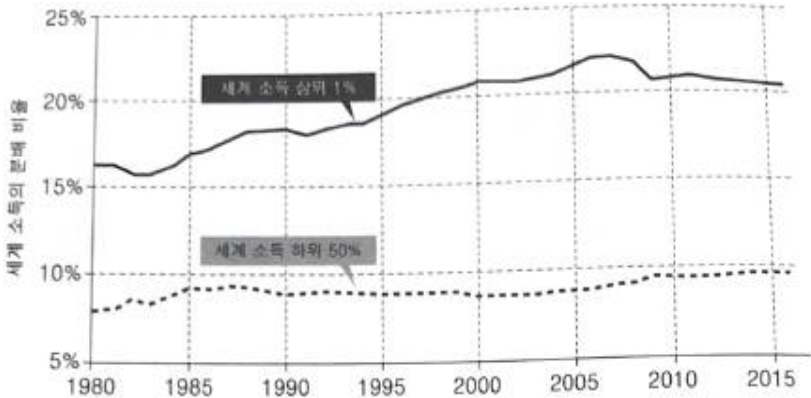
〈그림 4〉 세계 행복도 순위(2016-2018)



출처: John F. Helliwell 2019, 24,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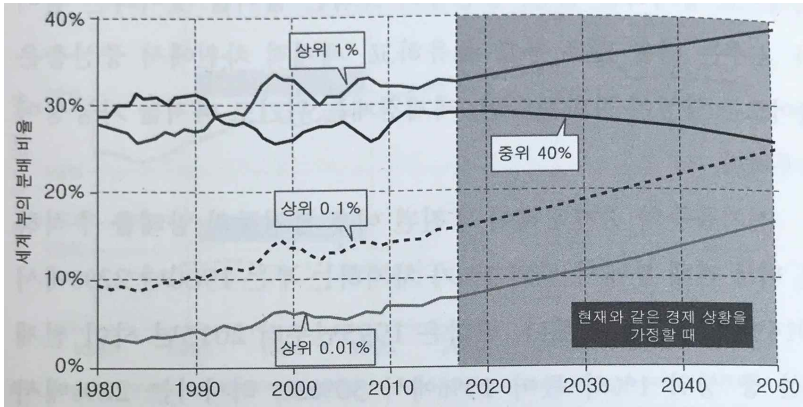
세계의 미래도 여전히 밝지 못하다. 20세기 후반부터 2015년까지 세계 소득 1%의 수입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하위 50%는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그림 5) 참조. 2050년까지 세계적 수준에서 부의 집중은 여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50년 기준, 소득 상위 1%(39%), 0.1%(26%), 0.01%(17%)의 수입은 계속 상승 곡선을 그어서, 세계의 중간계급인 40%의 수입(27%)보다 소득 상위 1%는 12% 높은 수입 비율을 나타내며 소득 상위 0.1%의 수입과 엇비슷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림 6) 참조. 이것은 그야말로 부의 집중과 불평등의 시대로의 진입을 명증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5〉 세계 소득 1%와 소득 하위 50%의 수입 차이(1980~2015)



출처: Alvarado et al. 2018, 9.

〈그림 6〉 세계 부의 분배 비율(1980~2050)



출처: Alvaredo et al. 2018, 13.

로티의 전망은 명백하다. 불평등에 의해 정치적 권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신분질서를 상징하는 특권계급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모든 중요한 결정을 독점해서 내리는 글로벌 특권계급을 갖게 되었으며, 그들에게 전혀 독자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권리와 어떤 국가의 국민의 투표권보다 앞서는 의사표시의 권리를 부여했다(Rotty 1999, 233).”

“두 개의 나라가 있다. 둘은 서로 교류하지 않고 동정을 표하지도 않는다. 마치 다른 구역, 다른 행성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서로의 습관과 생각, 감정에 대해 잘 모른다.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예절을 배우기 때문에, 같은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Disraeli 1998, 66).” 이런 사회에서 ‘다수의 약자’는 공포와 함께 삶을 연명해야 한다.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은 “일자리와 더불어 소속된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될 공포, 집과 더불어 여생을 위한 동산 일체가 ‘압류’될 공포, 행복과 명망의 고개에서 미끄러지는 자녀들과 시장가치가 어떻게든 간에 공들여 학습하고 연마해온

기술을 빼앗기는 자신을 맥없이 바라봐야 할 공포”와 맞닥뜨려야 한다(지그문트 바우만 2018, 30). 그렇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행복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 3. 대안사회를 지향하는 ‘커먼즈’ 운동이 성공할 수 있을까?

도시의 인간적 면모는 도시의 다양한 공간들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실천으로부터 나온다(데이비드 하비 2017, 58).

‘커먼즈’는 “사용자들의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규칙과 규범에 따라 공동으로 다스리는 공유된 자원, 물과 땅 같은 자연의 선물만이 아니라 문화적 산물이나 지식 같은 공유된 자산들 혹은 창조적 작품들도 포함”되는 무엇이다(Michel Bauwens, Vasilis Kostakis, Stacco Troncoso, Ann Marie Urratel 2017, 5). 그리고 ‘커먼즈 운동’은 도시를 변화시켜나가는 운동이면서 그 운동을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민주적 과정과 훈련의 장으로 도시가 활용되며, 도시의 물리적·환경적 공유자산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배타적·독점적 자본에 대항하는 사회적 실천이 전개되고, 권력과 도시의 물적 환경을 획득하여 이를 ‘공유자산화’ 해나가는 시민들의 연대활동(김갑곤 2019, 412, 414-415)으로, 또는 근대를 구성했던 국가와 자본의 외부에 자율적 공동체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대안근대로 이행하려는 목적을 가진 운동으로 규정한다(정남영 2017, 204).

따라서 ‘도시 커먼즈’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커먼즈의 출현 현상을 ‘도시’를 매개로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권리 담론을 도시적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정치의 위기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이승원

2019, 151)”하려는 것이다.

네그리와 하트(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는 ‘커먼즈’를 “개방적 접근과 집단적이고 민주적인 결정 및 자주관리로 정의되는 부의 한 형태”로 규정하며, 이 자치의 형식을 발명하는 것이 ‘커먼즈’를 위한 기획의 중요한 과제로 도출한다. 이 운동은 따라서 시장과 국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며, 공기, 물, 땅의 결실을 공통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제한된 자원의 분배를 결정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메커니즘 구축의 방법을 찾을 것을 제기한다(네그리·하트 2014, 9-11).

‘커먼즈’ 운동을 전개하는 진영은 도시의 삶을 구성하는 방식도 다르다. 즉, 국가의 성격과 소유권 테제부터 자본주의의 점진적 개혁을 통해 ‘사실상의 혁명’을 꿈꾸는 것으로 보인다. ‘커먼즈’ 운동가들은 기존과 다른 소유방식을 추구한다. 즉, 추출적 방식이 아닌 생성적 소유방식을 택하는 것이다(표 11 참조). 새로운 방식은 메타 경제적 네트워크(meta-economic networks), 통합 협동조합(the Catalanian Integral Cooperative, 스페인 까탈로니아), 상호부조 네트워크(the Mutual Aid Network, 미국 위스콘신 주 매디슨), 엔스파이럴(Enspiral, 뉴질랜드) 등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실험은 도시의 삶을 바꾸고 있다.

이들은 ‘반란 도시’(Rebel Cities)/ ‘대담한 도시’(Fearless Cities)를 지향하면서 세계 도시 곳곳에서 투명성 높이기,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책정을 가능하게 하기, 사회적 돌봄 협동조합들의 창출을 촉진하기, 공터를 공동체 정원으로 바꾸기, 기술과 도구를 공유하는 프로그램들을 공동창출하기를 실행한다고 밝힌다.<sup>5)</sup>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자치도시

<sup>5)</sup> 이런 실험은 ‘커먼즈’ 운동으로 명명되지 않았으나, 한국에서도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도시의 삶을 바꾸려는 시민들의 ‘일상의 정치’가 만들어내는 다양성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운동의 특징과 그 가능성이 무엇이 될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연합들(municipalist coalitions)을 형성하고, 국가와 커먼즈 기반 시민사회가 인간의 평등의 재출현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국가는 사유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공통화(commonfied)’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Bauwens et al. 2017). 즉, ‘생산 공동체’는 시민사회가 되고, ‘커먼즈 지향 기업가 연합들’은 시장 조직이 되며, 비영리 지원 단체는 국가(파트너 국가)가 되는 그런 미래를 주장한다(정남영 2017, 210).

〈표 1〉 추출적(extractive) 소유와 생성적(generative) 소유

추출적 소유	생성적 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적 목적: 단기간에 이윤 극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의 목적: 장기적으로 삶의 조건 창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채 구성원: 소유가 기업의 삶과 분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착 구성원: 소유가 당사자들의 손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에 의한 거버넌스: 자본시장에 의한 자동조종 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명에 의해 통제되는 거버넌스: 사회적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한 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지노 금융: 주인으로서의 자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관계자 금융: 친구로서의 자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 네트워크: 가격과 이윤만 위한 교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적 네트워크 : 생태적·사회적 규범들을 집단적으로 유지</li> </ul>

출처: Bauwens et al. 2017, 14.

자본주의의 진전과 함께 과거의 공유지에 근거한 삶의 형태로서 ‘공통적 부’를 가리키던 ‘commonwealth’는 연방, 국가 등을 뜻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변형되었다. 따라서 ‘공동의 것’이라는 의미의 ‘커먼즈’는 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었고, 모두는 소외되었으며, 그 소외의 과정에서 자본은 무한증식을 진행했고, 그 무한증식의 이익은 국가권력과 자본을 소유한 자들에게 집중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전개되는 ‘커먼즈’ 운동은 “다중이 자치 기술을 배우고 영속적인 민주적 사회조직 형태를 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네그리·하트 2014, 16). 이 새로운 조직형태가 국가권력과 자본에 귀속된 ‘공동의 것’을 그야말로 ‘공동의 것’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19세기 『공산당선언』의 “하나의 유령이 지금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는 첫 문장이 떠오를 정도로, 커먼즈 운동은 21세기에 출현한 유령처럼 지금 세계의 한 귀퉁이에서 비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비는 마르크스는 국가소유권을 옹호하지 않고 공동선을 위해 생산에 임하는 노동자집단에 부여된 소유권을 옹호한다고 규정하면서, 잉여생산과 분배를 사회화하고 누구에게나 열린 부의 새로운 공동성을 확립하자고 주장한다(데이비드 하비 2017, 61-63).

마르크스가 “생산수단의 공동점유(Gemeinbesitz) 토대 위에서 ‘개인적 소유(individuelles Eigentum)’를 다시 산출”한다고 규정한 것은 공동점유상태의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적 소유를 주장한 것이다. 마르크스가 구상한 사회주의는 소유권자는 개인들이고 공동체는 점유권자이며, 이로 인해 이 공동체의 법적 지위는 오로지 개인적 소유부분들로부터만 파생된다(황태연 1992, 121-122). 또한 마르크스에 의하면 정복된 국가권력은 소유의 국유화를 위해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적, 시민적 협동조합을 전국적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레닌도 마찬가지로 도시협동조합의 체제를 건설하면 사회주의 사회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았다(황태연 1992, 129-130).

대안사회를 지향하는 ‘커먼즈’ 운동은 자본의 ‘포식성 축적 습성’과 (소수)강자에 의한 그 습성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규제체제와 통제장치를 해체하는 이 악덕 결합체제의 외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즉, 국가와 자본의 본거지에서 새로운 자율적 공동체를 만들어 공간을 재탈환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커먼즈’ 운동은 새로우면서도 오랜

전통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레닌에 의해 기획된, 그러나 ‘붕괴된 사회주의’에 의해 왜곡된 소유권과 자율공동체로서의 시민사회, 그리고 마르크스가 기획했던 그 시민사회에 ‘하복(下服)’하는 기관으로서의 국가라는 구상을 21세기에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적 행정기관과 국가적 인민대표부가 인민을 소외시키는 자립성을 상실하고 사회의 공공적 정치를 대변하는 시민사회의 소통적 공공성과 새로운 시민적 공공권력에 굴복하는 그런 시대로 변혁되는 것이다(황태연 1992, 353).

그러나 빈 여백, 중요한 것들이 남아 있다. 왜 그런 사회로 가려는 것인가? 이 질문이다. 억압과 착취 없는 세상을 위해 계급투쟁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가 ‘영구 전쟁’과 ‘영구 계급투쟁’을 위한 것은 아니다. 오랜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 본성에 침잠된 공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도덕과 행복에 대한 희구 때문이다. 그것을 잇는다면 운동은 방향을 잃어버린다.

#### 4. 행복정책과 행복국가의 흐름이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거친 밥 먹고 물마시고 팔을 구부려 베고 누우니 이 역시도 즐거움이 그 속에 들어 있다. 불의하면서 부귀한 것은 내게 뜬 구름 같은 것이다 (飯疎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與浮雲). - 『論語』 「述而」

2019년 5월 30일 ‘히잡(Hijab)’으로 유명한 뉴질랜드 총리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은 뉴질랜드 총예산의 3.4%에 해당하는 규모의 ‘행복 예산’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4년 동안 256억 뉴질랜드달러(약 19조8600억원)의 행복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던 총리는 “GDP 증가가 경제활동

의 질을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경쟁에서 낙오하거나 뒤처진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뉴질랜드 국민의 정신건강, 아동 빈곤과 가정폭력, 마오리 원주민과 남태평양계 뉴질랜드인들의 삶의 질 개선,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한 생산적인 국가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불행한 사람들을 덜 불행하게 하는 데 예산을 가장 먼저 투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겨레21」 2019).

행복 전도 국가인 부탄은 행복을 국가정책 목표로 헌법에 명시했고, GDP를 대체하는 국민총행복(GNH) 개념을 도입했다. 국민총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정책은 행복영향평가에서 탈락하며, 국민총행복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위원회 조직도 운영하고 있다.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유럽과 미국의 정당·정부도 행복국가 노선으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영국정부의 WWW(Whitehall Wellbeing Working) 그룹, 미국 민주당의 생활정치·가족행복정책, 영국 노동당의 ‘Wellbeing State’, 영국 보수당의 ‘Happiness State’ 등이 그것이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2001년부터 행복개념을 도입해 행복경제와 행복정치를 추진했고, 2007년 영국 보수당 당수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은 행복(wellbeing)을 사회 진보의 징표로 보고, GDP가 아닌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Cameron 2007, 44). 총리가 된 이후 2010년 그는 새로운 척도로서 GWB(General Well Being)를 선언했으며,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행복(wellbeing)을 생각했다라면 지금쯤 영국은 더 나은 나라가 돼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문화일보』 2010). 중동의 아랍에미리트(UAE)도 2016년 행복부를 설립하고, 정부 차원에서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행복성과지표도 개발했으며, 정부 부처마다 행복사무관을 두고, 공공기관에는 행복위원회를 설치했다.

행복은 동서양 모두가 옛날부터 중시했던 가치다. 서양은 소크라테스·플라톤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윤리학』에 이르기까지 행복은 중요한 화두였다. 그 이후 제러미 벤담(Bentham 1996, 39-40)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문구는 공리주의의 대명사처럼 회자되고 있다.<sup>6)</sup>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도 “경제문제가 원래 뒷자리로 물러나고…삶과 인간관계, 창조와 행동과 종교와 같은 실질적 문제가 마음을 가득 채울 시대가 그리 멀지 않았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영원한 문제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적인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자유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과학과 복리(復利)의 강력한 혜택으로 받은 여가를 어떻게 보내서 현명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것인지와 같은 문제들을 고민(Keynes 1991, 367)”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의 헌법도 국민행복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전문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시했다.

과거에 중시했던 물질적 부(富)는 정보·자동화로 인해 전체 생산인구의 20% 미만의 인력 투입으로 산출할 수 있는 재화로 주변화 되었고, 21세기의 주도적 가치는 통신·서비스·지식·정보·문화·미학적 가치(패션·취향·영상오락·향락), 안전·환경·보건·스포츠·레저·웰빙 등 ‘행복’개념에 포괄되는 탈(脫)물질적 가치가 중요하게 부상했다. 즉, 행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정치와 국가의 목적으로 전환되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허치슨은 “덕성이 행위자의 가장 확실한 행복(Hutcheson 2004, 8)”이며, “어떤 행위든 - 세계의 가장 먼 지역, 또는 어떤 지난 시대에 있었을지라도 - 사랑, 인간애, 사의(謝意), 연민(compassion), 타인의 복리에 대해 마음 씀, 타인들의 행복에 대한 기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서 우리 앞

<sup>6)</sup>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지적소유권자는 허치슨이다. 허치슨은 1725년 『*Inquiry into the Original of Our Ideas of Beauty and Virtue*』에서 “최상의 행동은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최악의 행동은 동일한 방식에서 불행의 경우”이며, “도덕이라는 주제에 대해 수학적 계산을 도입하려고 시도”했다(Hutcheson 2004, 125).

에 표현되자마자,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 예쁜 행위를 찬미하고, 그 행위의 수행자를 칭찬한다”고 했다(Hutcheson 2004, 91).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덕성으로부터 공감의 의미 이해가 중요하다. 허치슨은 인애(仁愛, benevolence), 즉 사랑하는 감정은 인간에게 본성적이며, 이와 함께 또 다른 본성으로 동정심(compassion)을 들고 있다(Hutcheson 2004, 159). 그래서 맹자는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사람이라면 본성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동정심은 본능적으로 발동한다. 그래서 행복정책을 추진하는 영국 정부는 사회감성교육(Social and Emotional Aspects of Learning [SEAL])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에 도입한 것이다(리처드 레이어드 2011, 316).

‘커먼즈’ 운동도 윤리적 기획 속에서 출발한다. 네그리와 하트는 가난과 사랑을 언급하며, 배제된 주체로서 빈자가 아니라 “빈자의 생산성과 가능성을 힘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찾고, 개인주의의 고립성을 탈피하는 출구로서 사랑을 언급한다. 즉, “공통적인 것의 생산과 사회적 삶의 생산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적 사랑 개념”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적 기획’이 바로 “제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다중을 구축하는 경로”로 판단한 것이다(네그리·하트 2014, 19-23). ‘커먼즈’ 운동은 정치적 기획임과 동시에 윤리적 기획이며, 가난에 찌든 빈자들의 새로운 생산성과 가능성을 만들고, 고립을 탈피하는 연대의 힘으로서 사랑을 상징하고 있다. 그 윤리의 힘은 공감에서 시작되며, 그럴 때 정치적 기획이 현실로 시야에 들어온다.

## 5. 나가며: ‘공감의 정치’는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파국을 맞이해야만 파국이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지게 될 것 같다(아, 회고적으로, 단지 회고적으로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실로 섬뜩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 시도해보지 않는 한, 거듭해서 그리고 더욱 더 열심히 시도해보지 않는 한, 그 생각이 틀렸는지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 다(지그문트 바우만 2017, 115).

18세기 계몽철학자 실루에트(Etienne de Silhouette)는 정의보다 인애가 선차적이며, 누구나 동정심과 도덕 감정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Silhouette 1764, 62~63; 황태연 2016, 104~105 재인용). 스코틀랜드 도덕철학자들인 샤프츠베리(Anthony, Third Earl of Shaftesbury), 허치슨, 흄(David Hume), 그리고 이후 다윈(Charles Darwin)부터 캐롤 길리건, 제임스 윌슨, 아르네 베텔레센, 나탄 츠나이더, 마이클 슬로트, 프란스 드발, 대커 켈트너에 이르기까지 정의보다 인애가 우선한다는 인애의 ‘선차성 테제’를 주장했다.

인간은 모든 것을 공감을 통해 인지하고 이해한다. 공감(共情)은 “긍정적·부정적 감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감정을 자기 속에서 ‘재현’하여 남의 감정과 유사한 감정을 ‘남과 같이 느끼는’ 이심전심의 감정적 ‘작용’ 또는 ‘능력’(황태연 2014, 87)”을 의미한다. 동시에 “어려움에 처한 어떤 사람의 인지된 복지와 동일한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의해 유발된 타인 지

---

7) 공감에 대한 뇌 과학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인간은 신체적 모방과 흉내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신체적 모사가 뇌 속에서 이루어지면 자기의 신체적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갖고 변연계를 자극하여 신체적 모사대상인 외부 타인의 감정과 유사한 감정이 관찰자 뇌 안에서 재생된다. 이것이 공감이다.” 즉, “시청각피질 ⇨ 전운동피질 ⇨ 거울뉴런 ⇨ 뇌섬 ⇨ 변연계의 연결 메커니즘”이다(황태연 2014, 117-118).

향적 관점”으로 정의된다(Waytz at al. 2014, 2).

최근에 공감은 “인도주의의 위기와 폭력적 정치 갈등에서부터 기후위기와 종 다양성 파괴까지 세계적 도전을 막을 수 있는 기본적 힘”이며, 새로운 정치적 담론으로 논의되고 있다(Krznaric 2015, 3). 클린턴(Bill Clinton)과 오바마의 승리(Barack Obama)는 이들의 리더십과 함께 정치지도자의 공감에 이끌린 수천 만 명의 ‘공감유권자’들의 열광적 지지와 실천에 의해 가능했다는 논거가 제시되고 있다(Waytz 2014, 3). 또한 리프킨(Jeremy Rifkin)은 “공감이 없는 세상에는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Rifkin 2010, 179). 신경과학자 다마시오(Antonio Damasio)는 감정이 없는 사람들은 민감한 결정을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감과 같은 사회적 감정이 없는 사람은 객관적 의사결정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Lakoff 2011).

연대가 값비싼 사치품이 되면서 임시 동맹에 자리를 내주었고, 같은 상황에서 경쟁자보다 더 많은 이득을 뽑아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항상 급선무였다. 동료들과의 사회적 유대감은 약해지고, 회사나 조직에 대한 정서적 몰입도 약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괴롭힘이 학교에 국한되었지만, 이제는 직장에서도 흔한 특징이 되었다. 그것은 전형적으로 무력한 인물이 자기의 불만을 약한 이들에게 분출하는 증상으로, 심리학에서는 전위된 공격성으로 알려져 있다. 감춰진 공포감의 범위는 수행 불안부터 타인을 위협하는 폭넓은 사회적 공포에까지 이르고 있다 ([The Guardian] 2014).

경제적·정치적 양극화에 의해 ‘실제 전쟁 없이 진행되는 항구적 전쟁 상태’로 치닫고 있는 현대에 덩그러니 남은 단어는 ‘편견’과 ‘상대적 빈곤’이다. 상대방의 의견은 ‘들리지 않는 소음’이고, 가난에 찌든 삶을 쳐다보지도 않는 ‘무(無)동정심’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동정심과 공감은 사라지고

공포와 공격이 돌출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병리현상은 더욱 확산되고, 사회적 비용은 더욱 늘어나고, 사회적 연대는 빠르게 부서지고 있다. 그 이유는 “결국 친절한 협력, 상호 관계, 공유, 상호 신뢰, 인정, 존중 등을 바탕으로 하는 공생에 대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갈망을 경쟁과 경합(탐욕에 이끌린 소수의 축재가 모두의 행복에 이르는 왕도라는 믿음에서 도출되는 존재 양식)으로 대체한 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평등, 상호 존중, 연대, 우정…우리 대부분은 거짓말에 대한 요구는 말할 것도 없고 거짓말을 할 필요조차 별로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을 선호”한다(지그문트 바우만 2017, 109-110).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의 모순 구조를 극복하는 공정과 정의의 길도 공감과 사랑의 확대 속에 가능하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자본 물신(物神)적 이윤극대화·무한축적 메커니즘이 인간의 공리적 행위를 오히려 지배하고 있다. 자유시장의 경쟁조건은 자본축적의 무한성을 부추긴다. 어떤 수준의 자본축적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권력으로서 자본의 안전보장은 무한축적을 지속하는 것이다. 무한축적을 통해 한 분야의 독점에 도달하고, 이제 세계시장으로, 가급적 전 분야에 걸쳐 문어발식 독점 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처럼 자본은 인간의 본유적 도덕 감정을 “완전히 탈각시키고 관심의 초점을 감정(목적)에 무차별적인 수익성으로 이동시켜 고착화”하며, “인간 감정적 가치를 파괴하는 자본주의적 ‘목적합리적 행위’의 ‘물화성(物化性)’ 또는 ‘물신성(物神性)’”을 그 본질로 한다(황태연 2015, 2111). 치열한 기업에서 빠져나와 목가적 삶을 추구하는 직장인들을 우리는 발견한다. 그것을 실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TV를 통해 접하곤 한다.

불평등·불공정·불합리한 사회구조가 심화되면서 ‘유동하는 공포’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 의지할 곳 없는 사

회, 이런 사회 현상이 도처에서 일상화되니, 많은 국가들이 행복정책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 정부가 선정한 최우선 과제는 정신건강과 아동빈곤, 가정폭력 등이다. 이들에 대한 동정심을 사회정책으로 실천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제껏 배제되었던 마오리 원주민과 남태평양 뉴질랜드인의 삶을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선제적인 기회와 분배를 만들 수 있는 경제구조의 전환도 누구든 불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 때문이다.

이처럼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은 인애의 인간본성에 의한 사람과 생명을 사랑하는 공감능력이다. 따라서 ‘행복국가(happiness state)’는 인애에 근거한 정의와 복지 구현을 목표로 삼는 것이며, ‘공감의 정치(politics of empathy)’는 국민적 ‘공감장(共感場)’ 또는 ‘공감대(共感帶)’로서의 민심(民心)을 다문다문(多聞多見)·민시민청(民視民聽)하여, 이를 대의적 공론장의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와 결합하는 것이다(김종욱 2016, 127-128).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국민의 마음은 공감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친다면 국민은 그것을 ‘인정(仁政)’, 즉 ‘사랑의 정치’로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지지할 것이다.

‘공감의 정치’는 갈등과 투쟁의 극단의 정치를 배제하고, 약자를 위한 정치를 위해 다수 유권자를 구축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탈주하기 위해 인간의 공감을 통한 민주주의의 활로를 개척한다. 이것을 위해 현장의 생생함을 경험하고, 풀뿌리 조직과 민주주의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예방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놓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동물과 자연과 공존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한다. 이 사회는 ‘커먼즈’ 운동을 전개한 경험과 유사한 징후를 보여주는데, 이 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은 “가장 신선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치적 담론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더욱 여성

화”<sup>8)</sup> 되었다는 것이다. 행복국가도 어머니와 같은 넓은 품으로 국민을 안아주는 것이다. 그 목표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공감의 정치’다.

(2020년 4월 4일 접수, 5월 11일 심사완료, 5월 19일 게재확정)

---

<sup>8)</sup> Ann Marie Utratel & Stacco Troncoso 지음, 정백수 옮김, “Commons in the time of monsters: How P2P Politics can change the world, one city at a time”(2017.6.5.). <http://commonstrans.net/?p=744>(검색일: 2019.08.05.)

참고문헌

『論語』 述而

- 김갑곤. 2019. “도시를 민주적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시민자산화운동.” 『황해 문화』 여름호.
- 김종욱. 2016. “‘민주화 이후 정치’를 넘어 ‘공감과 행복’의 정치로: ‘87년 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정치적 탈주.” 『시민과세계』. 제29호.
- 데이비드 하비, 한서린 옮김. 2017. “커먼즈의 미래 사유재산권을 다시 생각한다.” 『창작과 비평』 45권 3호.
- 리처드 레이어드 지음, 정은아 옮김. 2011. 『행복의 함정: 가질수록 행복은 왜 줄어들는가』. 서울: 북하이브.
- 미셸 푸코, 이상길 옮김. 2016. 『헤테로토피아』. 서울: 문화과지성사.
-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지음, 정남영·윤영광 옮김. 2014. 『공동체: 자본과 국가너머의 세상』. 고양: 사월의책.
-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2014. 『공간의 생산』. 서울: 에코리브르.
- 이승원. 2019. “도시 커먼즈와 민주주의: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징과 동학에 관한 이론적 재고찰.” 『공간과사회』 제29권 2호. 134-174.
- 장세룡. 2002. “미셸 드 세르토의 일상과 민중문화.” 『서양사론』 제82호.
- 정남영. 2017. “대안근대로의 이행과 커먼즈운동.” 『오늘의 문예비평』.
- 제임스 C. 스콧 지음, 전상인 옮김. 2010.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했는가』. 서울: 에코리브르.
- 존 헬리웰, 거스 오도넬, 리처드 레이어드 지음, 우성대 외 편역. 2017. 『행복의 정치경제학』. 서울: 간디서원.
-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안규남 옮김. 2017.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나에게 던지는 질문』. 파주: 동녘.
-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정일준 옮김. 2018. 『레트로토피아(Retrotopia): 실패한 낙원의 귀환』. 파주: 아르테.
-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함규진 옮김. 2009. 『유동하는 공포』. 서울: 산책자.
- 통계청. 2018. 『2017 인구주택총조사』. 대전: 통계청.

- 황태연. 1992. 『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 서울: 나남.  
 황태연. 2011. 『공자와 세계(제1권)』. 파주: 창계.  
 황태연. 2014.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 1권』. 파주: 창계.  
 황태연. 2015.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 2권』. 파주: 창계.

- Alvaredo, Facundo et al. 2018. World Inequality Report 2018: Executive Summary. World Inequality Lab.
- Bauwens, Michel, Vasilis Kostakis, Stacco Troncoso, Ann Marie Utratel. 2017. *Commons Transition and P2P: a primer*. Amsterdam: The Transnational Institute
- Bentham, Jeremy. 1996.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 and Legislation*, (eds.) J. H. Burns and H.L.A. Hart.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Disraeli, Benjamin. 1998. *Sybil, Or the Two N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rvey, David. 2000. *Space of Hope*.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데이브 하비 지음, 최병두·이상울·박규택·이보영 옮김. 2001. 『희망의 공간』. 파주: 한울.
- Harvey, David. 2012. *Rebel Cities: From the Right to the City to the Urban Revolution*. London and New York: Verso. 데이비드 하비 지음, 한상연 옮김 (2017). 『반란의 도시』. 서울: 에이도스.
- Helliwell, John F., Richard Layard, Jeffrey D. Sachs. 2019. *World Happiness Report 2019*.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s Solutions Network.
- Hutcheson, Francis. 2004. *An Inquiry into the Original of Our Ideas of Beauty and Virtue; In two Treatises*. 1st ed. 1726; 3rd ed. 1729; London: Printed for R. Ware, J. Knapton etc., 5th ed. 1753. Indianapolis: Liberty Fund.
- Keynes, John Maynard. 1991.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grandchildren," in *Essays in Persuasion*. Norton(1991; originally published in 1931).
- Krznicaric, Roman. 2015. *The Empathy Effect: How Empathy Drives Common Values, Social Justice and Environmental Action*. friends of the earth.
- Layard, Richard. 2006.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New York: Penguin Books. 리처드 레이어드 지음, 정은아 옮김. 2011. 『행복의 함정: 가질수록 행복은 왜 줄어드는가』. 서울: 북하이브.

- Mendieta, Eduardo. 2005. "The axle of evil: SUVing through the slums of globalizing neoliberalism. *City*, 2.
- Rifkin, Jeremy. 2009. *The Empathic Civilization: The Race to Global Consciousness in a World in Crisis*. New York: Penguin. 이경남 역.2010. 『공감의 시대』, 서울: 민음사.
- Rorty, Richard. 1999. "Globalization, the Politics of Identity and Social Hope(1996)." in Rorty, *Philosophy and Social Hope*. New York: Penguin.
- Scheidel, Walter. 2017. *The great leveler. Violence and the history of inequality from the Stone Age to the twenty-first centu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발터 사이델 지음, 조미현 옮김. 2017. 『불평등의 역사』. 서울: 에코리브르.
- Silhouette, Etienne de. 1764[1729]. *Idée générale du gouvernement et de la morale des Chinois; tirée particulièrement des ouvrages de Confucius*. Paris.
- Lakoff, George. 2011. "Empathy, Sotomayor, and Democracy: The Conservative Stealth Strategy." *The Huffington Post* 30 May 2009. Updated 25 May 2011.  
[http://www.huffingtonpost.com/george-lakoff/empathy-sotomayor-and-dem\\_b\\_209406.html](http://www.huffingtonpost.com/george-lakoff/empathy-sotomayor-and-dem_b_209406.html)(검색일: 2016. 8. 30.)
- Layard, Richard(2003). "Income and Happiness: Rethinking Economic Policy." 27. February.  
<http://cep.lse.ac.uk/events/lectures/layard/RL040303.pdf>(검색일: 2016. 9. 10.)
- Waytz, Adam et al.. 2014. *Ideological Differences in the Expanse of Empathy*.  
[http://www-bcf.usc.edu/~jessegra/papers/WIYG.circle\\_chapter\\_draft.pdf](http://www-bcf.usc.edu/~jessegra/papers/WIYG.circle_chapter_draft.pdf)(검색일: 2016. 6. 19.)
- “캐머런총리, 국민행복지수 조사 “GDP보다 GWB,” 「문화일보」. 2010.11.27.
- “성인 4명중 1명 정신질환 경험…정신과 상담 고작 22%.” 「중앙일보」. 2017.04.12.
- “상위 10%가 전체 소득 43% 차지…상위 1%보다 10%가 더 심해.” 『중앙일보』 (2018.12.16).

“한국, 아동 삶 만족도 OECD 최저…‘친구와 놀 시간이 없어요.’” 「조선일보」 . 2019.05.24.

“뉴질랜드는 ‘행복’이 목표다.” 『한겨레21』 . 제1269호(2019.06.30.).

Ann Marie Utratel & Stacco Troncoso 지음, 정백수 옮김. “Commons in the time of monsters: How P2P Politics can change the world, one city at a time”(2017.6.5.). <http://commonstrans.net/?p=744>(검색일: 2019.08.05.)

Paul Verhaeghe, Neoliberalism has brought out the worst in us. 『The Guardian』 (2014.09.29.)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4/sep/29/neoliberalism-economic-system-ethics-personality-psychopathic>(검색일: 2019.04.03.)

Provisional data from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oe.cd/idd>(검색일: 2019.10.9.)

The City's citizenship and 'politics of empathy' : Escape from  
'Liquid Fear' to a 'Happiness State'

*Kim Jong-wook\**

This article seeks ways to prevent the intensification of global inequality and the Earth destruction by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and growth strategy of natural destruction. It describes the inequality, injustice, and unreasonable reality in the city, a symbol of modernity and capitalism, and examines the 'commons movement' and 'politics of empathy' as directions to solve this. It is to combine the 'commons movement' aimed at an alternative society and the expansion of human nature's empathy, to form a new society where the nation and society pursue happiness. The 'commons movement' is to recapture space by creating a new autonomous community in the homeland of the state and capital. 'politics of empathy' is to exclude the extreme politics of conflict and struggle, to build a majority voter for politics for the weak, and to pioneer the path of democracy through human empathy to escape the crisis of democracy.

**Key Words:** empathy, happiness, commons movement, inequality, capitalism, liquid fear

---

\*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at Dongguk University,